

##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비상사태’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말한다.
  - ②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기본지침’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 ④ ‘비상대비 행정기관의 장’이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담배의 수출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물적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비상대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비자원 중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지정한다.
-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② 집행계획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국무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③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④ 실시계획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고 주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을 받은 인력자원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인력의 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물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물자에 지정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마다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업체의 장에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주무부장관이 정부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집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 ~ ㉣에 들어갈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 ㉠ )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 ㉡ )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도 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군·구 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u>㉠</u>	<u>㉡</u>	<u>㉢</u>	<u>㉣</u>
① 9월 말	10월 10일	10월 말	11월 말	11월 말
② 9월 말	10월 말	11월 10일	12월 말	12월 말
③ 10월 말	11월 10일	11월 말	12월 말	12월 말
④ 10월 말	11월 말	12월 10일	12월 말	12월 말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2019년 11월 30일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될 수 없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 ㄴ. 25세의 등대원
- ㄷ. 입학한 날부터 7년이 되는 한국과학기술대학 재학생
- ㄹ.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27세의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① ㄱ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정이 있으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동원 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대원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하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와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철도·궤도·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이전·분산·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③ 등화 및 음향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보상을 요하는 응급조치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일부터 30일 내에 손실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종 선발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그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때에 종료된다.
- ③ 「병역법」상 현역병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자는 예비군 조직에 포함된다.
- ④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해당 거주지 관할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합방위법」상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는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포함하여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이라도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역예비군 중대는 동·읍·면 단위로 설치하고 소대·분대는 통·리 단위로 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비군자원인 보충역의 병을 그 거주지가 아닌 시·군·자치구 내 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 ④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직장예비군이 최근 5년간 2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도(道) 내에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에서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문 2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다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지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다.
- ③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이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해야 한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②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 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동원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보류원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의 보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러하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이 동원명령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재해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준용하되,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재해보상금의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 ③ 장애보상금을 받은 예비군대원이 그 상이(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문 25.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制式)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때, 베레모의 경우 모표는 그 중앙이 베레모 앞면의 중앙과 일치하게 부착한다.
  - ②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어깨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
  - ③ 흉장은 근무복 상의 명찰 상단 우측에 부착한다.
  - ④ 휘장의 지도는 중대장의 경우 금색으로 도금하되, 예비군제복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

- 문 26. 예비군법령상 긴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p>ㄱ. 무장공비가 마을에 침투하였을 때, 수탁경찰서장은 무장공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포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다.</p> <p>ㄴ.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기간, 구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ㄷ. 수탁경찰서장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 수탁경찰서장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조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ㄹ. 재산을 제거하는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p> <p>ㅁ. 보상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p>
--

	<u>ㄱ</u>	<u>ㄴ</u>	<u>ㄷ</u>	<u>ㄹ</u>	<u>ㅁ</u>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 ②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보건복지부이다.
- ③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에 대한 예보·경보는 기상청장이 실시한다.
-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업무와 그 권한 행사자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ㄱ.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시·도지사</li> <li>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의 편성 - 행정안전부장관</li> <li>ㄷ. 시·도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의 작성 - 행정안전부장관</li> <li>ㄹ.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작성 - 국무총리</li> </ul>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음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집행계획의 심의
-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①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 ④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 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ㄷ.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ㄹ.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도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ㄹ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문 31. 재난관리책임기관인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민간인 甲 소유의 지역을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C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으로부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K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소유의 지역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에 관한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를 K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K지방자치단체의 장은 甲 소유의 지역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에서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특정관리대상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기관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를 명하려면 먼저 정밀안전진단을 명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없이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가 작성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관리에 관한 응급조치 등 재난 대응의 지시 및 보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재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를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을 할 수 있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평가 대상이 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ㄴ. 소방청장은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평가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다른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ㄹ.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 법령 I - 헌법

- 문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 문 2.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국적취득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③ 미성년인 외국인이 입양으로 국적을 취득하려면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 ④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을 경우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 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사재판에 출정하기 위하여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 ② 수사기관이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배아에 대한 5년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의무를 규정한 것은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지만, 국가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 4.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헌법상 청원권은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원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두로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④ 국회에 청원을 할 때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 것은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넘어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5.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제재로서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으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직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②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서류의 열람은 허용하고 등사만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③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형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고,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 ④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퇴거의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 7.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문 8.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감찰할 수 없다.
- ④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장이 퇴직을 명한다.

문 9.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 ②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반드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문 10.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률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 ③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며,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의원 모두가 대표발의의원이 된다.
- ④ 국회의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문 11.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이나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② 국회가 국회부의장 3인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장 등의 선거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문 12.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13.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데,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 ②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④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문 14. 주민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주민투표권은 법률상 보장되는 참정권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 같이 헌법상 보장되는 참정권과 구별된다.
- ③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문 15.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선거 영향력을 막는 제도로 헌법에 합치된다.
  - ② 「군인사법」이 부사관으로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하는 것은 숙련된 부사관의 활용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부사관 지원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